

코로나19 확산, 충남형 재난기본소득이 필요하다.

코로나19 대응 연구추진단 (사회통합연구실)

박경철 책임연구원/사회통합연구실장

(kcpark@cni.re.kr)

본 연구는 최근 코로나19의 지속적인 확산으로 인한 경기 침체와 취약계층 생계위기를 타파하기 위한 강력한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재난기본소득의 논의 배경과 필요성, 타 지자체 도입 사례, 주요 쟁점 등을 토대로 충남도에서의 도입 방향을 모색하는 데 있음

CONTENTS

1. 재난기본소득의 논의 배경
2. 재난기본소득의 주요 내용 및 사례
3. 재난기본소득의 주요 쟁점
4. 결론 및 제언

요약

- ◀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경기 쇼크에 대응하기 위해 최근 재난기본소득 도입이 급부상하고 있음
 - 코로나19의 확산과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가 갈수록 악화되자 최근 지자체 단체장을 중심으로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음
 - 재난기본소득은 코로나19처럼 재난 피해가 특정할 수 없는 상태에서 선별 없이 신속하게 지급되는 장점이 있음
 - 현재 정부에서는 11조7천억원의 추경을 편성했지만 이러한 액수로는 경기 쇼크를 극복할 수 없다는 게 중론임
- ◀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재난기본소득 도입 요구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 국내에서는 전주시가 취약계층 5만명을 대상으로 긴급 생활안정자금으로 1인당 52만 7천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 서울시와 강원도에서도 중위소득 이하 가구, 취약계층,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 생활안정자금 등을 지원키로 함
- ◀ 현재 중앙정부에서도 2차 추경 시에 재난기본소득을 고려하고 있는 만큼 충남도와 각 시군에서도 적극 조응 필요
 - 많은 지자체 단체장과 학계의 요구로 인해 현재 문재인정부에서도 2차 추경 시 재난기본소득을 고려하고 있는 만큼 적극 조응 필요
 - 중앙정부는 보다 많은 국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재난기본소득 실시를 요청하고 충남도와 각 시군은 재난으로 더욱 어려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과감한 정책 실시를 제안함

1. 재난기본소득의 논의 배경

- 지난 2월 27일, 이재웅 전 쏘카 대표가 재난기본소득 도입 제안 이후 논의 촉발
 - 이재웅 전 쏘카 대표는 코로나19의 확산 및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와 취약계층의 생계위기 타파를 위해 1인당 50만 원의 재난기본소득 도입 제안
 - 이후 광역단체장으로는 김경수 경남도지사, 이재명 경기도지사, 박원순 서울시장 등이 정부를 향해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촉구함으로써 재난기본소득 논의가 촉발됨
 - 또한 기초지자체 가운데 재난기본소득과 유사한 전주시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화성시 소상공인 지원 사업이 발표되면서 재난기본소득 논의가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줌
- 재난기본소득 논의가 촉발된 데에는 기존 재난대책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
 - 코로나19 사태의 특징은 피해 규모를 가늠하기 어렵고 피해 대상이 특정할 수 없을 정도로 광범위하다는 점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부의 추경 안은 규모도 적을 뿐만 아니라 특정 지역, 특정계층에 한정하고 있어 정책 효과의 한계가 분명함
 - 이 때문에 코로나19 사태처럼 비상상황에서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직업 유무, 소득 여부와 상관없이 일정한 소득을 균등하게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 도입 요구가 급부상하고 있음
 - 재난기본소득의 도입에 관한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찬성 여론이 우세하며 문재인 대통령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비상사태에서 기존의 상식을 뛰어넘는 과감한 재정투자를 요구하고 있어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음
- 충남도 또한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도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 기본소득 도입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코로나19 발생 초기 아산시의 경우 우한교민의 경찰인재개발원 수용으로 인해 아산시 경제가 큰 타격을 입었으며 천안시의 경우 최근 한 스포츠센터를 중심으로 한 코로나19의 집단 감염으로 지역

경제가 큰 타격을 받고 있음

- 천안시, 아산시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해 충청남도 전체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중앙정부의 재난기본소득 도입과는 별도로 충청남도 차원의 과감한 대책이 필요함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재난기본소득의 동향을 살펴보고 국가 차원에서의 재난기본소득 도입 방안과 충청남도 차원의 도입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02

재난기본소득의 주요 내용 및 사례

1. 기본소득의 개념

• 기본소득의 정의

- 기본소득(basic income)이란 국가 또는 지자체(정치공동체)가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직업 유무, 소득 여부 등과 상관없이 생활에 필요한 일정한 금액을 정기적으로 균등하게 지급하는 현금성 소득을 말함
- 기본소득의 6가지 원칙: 모두에게 준다(보편성), 개인에게 준다(개별성), 조건없이 준다(무조건성), 정기적으로 준다(정기성), 충분히 준다(충분성). 이 중 보편성, 개별성, 무조건성은 주요 3대 원칙임.
- 기본소득은 6가지 원칙이 있지만 특정 계층이나 특정 조건 하에서 실시하되 기본소득의 몇 가지 중요 원칙을 따를 때 넓은 의미에서 기본소득으로 봄. 이를 제한적(한시적) 기본소득 혹은 범주형 기본소득이라 부름

* 예: 청년기본소득(연령), 농민기본소득(조건), 재난기본소득(조건, 기간) 등

• 기본소득의 실시 현황

- 한낱 몽상가의 터무니없는 생각으로 치부됐던 기본소득은 현재 세계 각국에서 실시되고 있거나 실험되고 있음
- 미국의 알래스카주에서는 이미 1980년대부터 석유자원을 활용한 시민배당을 통해 매년 연말에 개인당 약 30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음
- 그 밖에 미국, 캐나다, 핀란드, 인도, 나미비아, 한국 등에서 국가차원 혹은 지방정부 차원에서 실시하거나 추진 중에 있음
- 우리나라에서는 성남시의 청년배당,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 서울시 청년수당, 중앙정부의 아동수당, 각 지자체에서 실시되고 있는 농민수당·농민기본소득 등이 있음

•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재난기본소득의 특징

- 보편성: 재난으로 피해를 보는 국민을 특정할 수 없고 추산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모든 국민에게 지급함

- 한시성: 재난으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지급함
- 시급성: 재난으로 인해 생계위기에 처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선별과정을 최소화해 신속히 지급함

- 재난소득/재난수당의 특징

- 가급적 재난기본소득의 원칙을 따르되, 재난으로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과 특정지역에 지급되는 현금성 소득/수당

- 긴급복지 지원금

- 실업자, 임시직노동자, 저소득층, 취약계층 등 재난으로 인해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층에 제한적으로 지급되는 긴급 지원금

2. 최근 재난기본소득 논의 동향

- 최근 논의 동향¹⁾

- 2월 27일: 이재웅 전 카카오대표, 1인당 50만원 재난기본소득 제안
- 3월 8일: 김경수 경남도지사, 전국민에게 1인당 100만원 재난기본소득 제안

“지원대상 선별하는 데 시간과 행정비용을 낭비할 겨를이 없다.”

“51조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면 경제활성화로 늘어나는 조세수입이 8-9조에 이를 것으로 추정”

“고소득층 지급액은 내년에 세금으로 환수”

“비상 상황이므로 과감하게 결단하고 신속하게 추진해야: 추경과 함께 논의하자”

- 3월 9일: 박원순 서울시장,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정부의 추경안 11조7천억원과는 별도로 코로나19로 인해 생계절벽에 맞닥뜨린 실질적인 피해계층, 즉 재난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에 대한 직접적인 긴급지원(소요예산 약 4조8천억 원)이 추가되어야, 중위소득 기준(4인가구 월소득 447만원) 이하의 천만 가구 중 기존 복지제도 혜택을 못 받는 약 8백만 가구 대상, 2-3월 생활비로 전통시장 상품권이나 선불카드 60만 원을 주고 5월 말까지 쓰게 하자.

1) 유종성(2020. 3. 17). <국회 긴급토론회> 발표자료 보완 및 재정리.

- 3월 9일: 청와대 윤재관 부대변인, "정부는 재난기본소득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 다만 그 제안이 나온 취지는 잘 이해하고 있다."
- 3월 11일: 홍남기 부총리, "정부 재정여건상 굉장히 선택하기 어려운 옵션"
- 3월 12일: 이재명 경기도지사, 전 국민에 100만원씩 일시적 재난기본소득을 지역에서 일정기간 내 소비해야 하는 지역화폐로 지급

"납세자만 혜택 보는 급여세 감면 같은 간접적 정책보다 모든 국민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직접 지원정책이 더 낫다"

- 3월 12일: 청와대 이호승 경제수석, "재난기본소득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규모, 자원 조달 방법, 대상 등에 충분한 국민적 공감대가 있어야 한다는 신중한 생각"
- 3월 13일: 전주시, "긴급생활안정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지원금", 실업자와 비정규직등 5만여 명에게 1인당 52만 7천원
- 3월 14일: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부정적 입장 강조

"추경은 단기 경기부양 정책: 기본소득은 단기 재정정책의 세 원칙-적시성, 특정성, 한시성-에 모두 위배"

"어느 나라도 한 국가 단위에서 이것을 해본 경험이 없다."

"어떤 특정계층 대상이 아니라 기존사회보장제도의 대체로서 특정성이 없다."

"한 번 도입되면 영구적인 제도가 되어 뒷감당을 할 수 없다."

"주장하는 게 기본소득 개념이 아니라 '긴급 생활안정 수당'이라면 용어부터 정확히 해야."

- 3월 16일: 문재인 대통령, (이재명 지사의 재난기본소득 건의에) "코로나19 대책은 이번 추경 한번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 "어떤 형태라도 취약계층 지원 중요" '재난기본소득' 검토 가능성

"문 대통령은 기본소득 개념을 담은 여러 유형의 지원 방안에 대한 결론을 내지 않았고, 이를 정부와 지자체가 논의할 과제로 남겨두고 토론 가능성을 열어놓았다"(강민석 대변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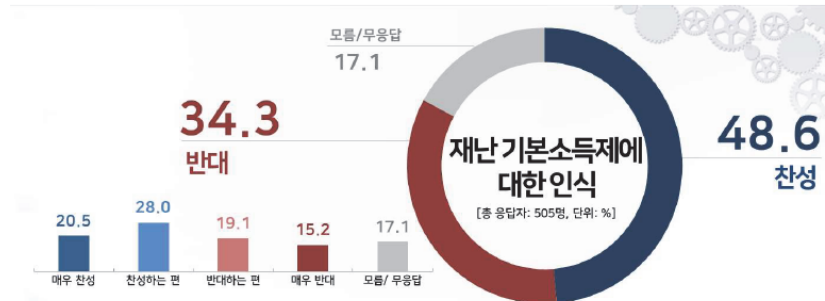
- 3월 18일: 경북대 최한수 교수(경제통상학부) "지금은 재정건전성을 따질 때가 아니다. 지자체가 취약계층에 긴급 생활비를 지원하는 것은 사회보험을 보완하는 효과가 있어 지금 같은 시기에 적절하다."

●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여론 동향

-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국민여론은 점차 찬성 의견이 높아지고 있음
- YTN이 리얼미터에 의뢰한 조사(3.13) 결과, 전국적으로 찬성 48.6%, 반대 34.5%로 찬성이 14.1%p 높았음. 이는 이전 조사(3.3) 때보다도 찬성 6.0%p 증가, 반대 13.0%p 감소한 수치임

- 대전·세종·충남의 경우 찬성 48.9%, 반대 31.3%로, 찬성의견이 17.6%p 우위로 전국 평균보다 다소 높게 나타남

◆ 재난 기본소득제에 대한 인식



[그림 1]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3.13)

• 전국 지자체 실시 및 제안 사례

[표 1] 전국 지자체 재난기본소득/재난수당 실시 및 제안 사례

	서울시	강원도	전주시	화성시
내용	재난 긴급생활 생활비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	긴급 생활안정을 위한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재난생계수당
관련 법률/조례	서울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전염병 등으로 생긴 피해계층에 한시적 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 추진)	강원도 코로나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3.11 도의회 입법 발의)	전주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	화성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위소득 이하 117만 가구 - 기존 추경 지원대상은 제외 - 실업급여 긴급복지, 청년수당 수급자 등은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30만명 - 매출액 7천만원 이하 소상공인 7만8천명 - 실업급여 수급자 2만7천명 - 기초연금 수급자 19만5천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5만명 -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일용직 등 비정규직 근로자와 실직자 등 * 소상공인, 실업급여 수급대상자 등은 별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3만 3천여 업체(근로자수 10만 명 미만) - 전년대비 매출액 10% 이상 감소 소상공인 * 제외업종: 유흥업, 도박, 사행성 업종 등
지원 금액	30~50만원/가구 30만원(1·2인 가구) ~ 50만원(5인 가구이상)	40만원/1인	52만7천원/1인	약 200만원/업체
소요 예산	약 3271억원	약 1,200억원	약 250억원	약 660억원
지원 방법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현금 또는 상품권	지역은행 체크카드 (3개월 내 지역 상용)	현금
지급시기	2020. 4.	2020. 4.	2020. 4.	2020. 4.

자료: 각 지자체 발표 자료

- 국외 재난기본소득/재난수당 실시 및 논의 동향

[표 2] 국외 재난기본소득/재난수당 실시 및 논의 동향

국가/지역	실시 및 논의 내용	비고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인 1인당 1000달러(약 124만원)를 2주일 내 지급 (3.18) - 약 5천억 달러 소요 	근로소득세 대폭 감면을 포기하고 '제한된 재난기본소득'으로 선회
홍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인 영주권자 700만 명에게 1만 홍콩달러(약 155만원) 지급 발표(2월말) - 총 710억 홍콩달러(약 11조원) 소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소득 신규 이민자들 포함 - 6월에 일괄 지급 예정
마카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주민(62만명)에게 3000파타카(약 45만원) 현금 카드 제공(2.13) 	
싱가포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세 이상 모든 시민권자를 대상으로 소득과 재산에 따라 최고 300싱가포르 달러(26만원)를 일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에게는 각각 100싱가포르 달러를 추가 지원하고 저소득 근로자 지원제도 대상자도 100~720싱가포르 달러 추가 지급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 국민에게 현금 1만2천엔(약 14만원) 지급(3.18) 	
호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훈련생 12만 명에게 9개월 간 13억 호주달러 (1조 1000억원) 지원 - 650만 명의 연금과 실업급여 수급자에게 1인당 750호주달러(58만원) 지급 	

자료: 한겨레, 오마이뉴스 등 언론 보도자료 참고

- 국외 유명학자 주장 내용

-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경제학자 폴 크루그만: “현재와 같은 재난 시기에는 납세자만 혜택을 보는 세액 감면 등 간접지원보다는 현금 지급과 같은 직접 지원 방식이 더 효과적임”(프리티안 2020. 3. 18)
- 보수 경제학자인 그레고리 멘큐 하버드대 교수: “돈이 필요한 사람들을 추려내는 것이 매우 어렵고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일임을 감안할 때, 모든 미국인들에게 1000달러를 최대한 빨리 지급하는 것이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다”, “급여에서 떼는 세금을 깎아주는 방식은 이 상황에서 유효하지 않다, 일하지 못해 수입이 없는 사람은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3월 13일 본인 블로그 게시 글, 오마이뉴스 2020. 3. 18)

3. 재난기본소득 실시의 법률 및 조례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47조(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47조 제1항 감염병 환자 등이 있는 장소나 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대해 일시적 폐쇄, 일반 공중의 출입 금지, 해당 장소 내 이동제한, 그 밖에 통행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 제70조(손실보상)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손실을 입은 자에게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 긴급복지지원법

- 제1조(목적) 이 법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하게 함을 목적으로 함
- <아산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 ▶ 제2항. 임신, 출산, 양육(만12세 이하) 등으로 인해 소득활동이 불가하거나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 ▶ 제10항.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 ▶ 제12항. 그 밖에 질병, 재난 등 긴급 사안으로 특별한 지원·보호가 요구되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제1조(목적)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전주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 제3조(저소득주민 지원) 시장은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금전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대상자):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2) 예기치 못한 재난, 사고 및 실업, 사업실패, 질병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 긴급지원이 필요한 사람, 3) 그 밖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포함한 다른 법에 따른 공적지원을 받지 못해 생활안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사람

03

재난기본소득의 주요 쟁점

1. 명칭의 문제

- 보편적 복지 개념인 ‘재난기본소득’을 지향하되 ‘긴급 생활안정자금’ 등 목적에 맞는 다양한 명칭 사용 가능
 - 누구에게나 똑같이 일정한 소득을 지원하는 기본소득에 대해서 일정한 반감이 있기 때문에 기본소득을 주는 합당한 명칭을 먼저 정하고 부제로 ‘재난기본소득’을 쓰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전염병(코로나19) 피해 확산으로 인한 긴급재난지원금(일명 ○○○형 재난기본소득), 긴급재해 복지자금(일명 ○○○형 재난기본소득), 긴급생계지원금(일명 ○○○형 재난기본소득) 등
- ※ 전주시의 경우: 긴급 생활안정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지원금은 대상인원이 적고(약 5만명) 선별조건(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일용직 등 비정규직 근로자와 실직자 등)을 두기 때문에 ‘재난기본소득’이라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음

2. 대상 선정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역할 분담 필요
 -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최대한 조건 없는, 비차별적 기본소득 실시
 - 지방정부에서는 예산의 한정 등으로 취약계층(실업자, 비정규직 노동자, 저소득층 등)을 특정한 제한적 기본소득 실시
 - 중앙정부에서도 예산에 한정이 있다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제한적 기본소득을 실시하는 방안 고려 필요
 - 선별이 가능한 대상에 대한 맞춤형 지원(가령 자가격리자에 대한 상병수당)이 우선이지만, 선별이 불가능한 많은 어려운 이들을 위해 긴급지원을 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전국민에 대한 일률적인 현금 지급임(유종성, 2020)

※ 유종성 교수는 강신욱(2017)의 연구 등을 인용하며 재난기본소득은 사실상 대상자 선별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함. 그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받고 있는 빈곤가구의 23%, 장기빈곤층의 32% 외에 광범한 사각지대(차상위계층)에 존재하고 있는 다수의 빈곤가구가 부양의무자 조건 등으로 인해 배제되며, 제도와 절차의 복잡성 및 낙인효과 때문에 많은 잠재적 수급대상자가 신청하지 않는다고 주장함. 또한 우리나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복지수급자 정보만을 통합, 관리하기 때문에 사각지대를 파악하지 못한다고 함

- 따라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기본소득을 실시할 경우 우선은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일정 소득 이상의 부유층에 대해서는 연말 소득과세화 또는 자발적 기부를 통해 환급받는 방법을 제안할 수 있음

3. 자원 마련

- 국채 발행 또는 재난 관련 법에 근거한 예산 사용

- 흔히 기본소득은 자원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의 문제라고 함
- 현재 정부의 추경안은 11조원이지만 우리나라 경제 규모로 보면 20~30조원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음. 그럴 경우 재난기본소득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함. 현재 정부는 추가적인 추경 편성을 통해 50조원 규모의 예산을 확보할 계획임
- 추가 자원은 국채 발행 등으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우리나라는 GDP 대비 국채 비율이 40%로 다른 선진국에 비해 매우 건전한 편임. 우리나라보다 재정 건전성이 좋지 않은 미국, 일본 등에서도 현금성 지원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중앙정부는 재난기본소득을 위해서는 감염병 예방법, 긴급복지지원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해 마련된 예산, 기금 등을 사용할 수 있음

- 지자체는 달리 접근 필요

- 지자체는 위의 재난 관련 법률과 조례에 근거해 마련된 예산, 기금 등을 사용할 수 있음. 단, 관련 조례가 없는 경우 혹은 예산 및 기금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긴급히 조례를 재정할 수 있고 예산 및 기금도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음
- 재난 관련 법률과 조례에 근거한 예산 및 기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관련 조례가 없는 경우가 있고, 있다고 하더라도 액수가 적기 때문에 예산을 전용해야 사용이 가능할 수 있음.
- 이를 위해서는 자체적인 합의의 과정이 필요함. 특히, 각종 기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운영위원회 등의 승인을 거쳐야 함

4. 지급 방법

- 한시적 사용가능한 지역상품권 또는 지역화폐 지급
 - 재난기본소득은 긴급 생계비 지원을 통한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지역 내 사용 가능한 상품권 또는 지역화폐 지급이 바람직함

04 결론 및 제언

- 재난기본소득은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
 - 재난기본소득 또는 재난수당은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타이밍이 중요함. 신속한 실행을 위해서는 위험 부담이 적으면서도 가급적 많은 사람들이 수혜를 받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임
 - 따라서 중앙정부는 2차 추경을 통해 보편복지 성격의 재난기본소득으로 추진하고, 충남도와 각 시군은 재난의 장기화로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제한적 재난기본소득 추진 필요
 -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경우 재난기본소득 효과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필요한 정책과 중장기적인 정책을 나누어 대응해 나가야 할 것임
- 충남도 특성을 반영한 재난기본소득 혹은 재난수당 지급
 - 현재 서울시, 강원도, 전주시, 화성시, 아산시 등 많은 지자체에서 다양한 형태의 제한적 재난기본소득 또는 재난수당 실시를 계획하고 있음
 - 따라서 지자체에서는 중앙정부의 보편적 재난기본소득을 바탕으로 지자체의 특수성을 감안한 재난기본소득 또는 재난수당 실시가 필요함
 - 예를 들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충남형 긴급 재난기본소득으로 충남도의 핵심 정책과제인 저출산문제 해결과 연계해 재난 시 특히 취약한 임산부를 취약계층에 포함한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하는 방식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충남도와 각 시군에서는 현재 유·초·중·고의 개학 연기로 인해 학교급식이 중단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을 위한 재난기본소득(재난수당) 지급도 고려가 필요하며 액수는 적더라도 가급적 많은 도민이 조속히 수혜를 받는 방향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유종성. 재난 기본소득의 필요성과 구체적 대안 검토. 재난기본소득 긴급 국회토론회 발표 내용
(2020. 3. 17)

기타 각종 언론자료